

李 “서민, 금융에서 배제되면 안 돼”… 포용금융 의무 강조

“은행은 준공공기관, 공적 책임 필요”
수익만 추구하는 구조 비판하고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주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면서, 그게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 아니냐”라며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격려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은행들의 토대가 주택은행·상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출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공공성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상환 능력을 평균으로 해서 이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금융의 원리”라고 했다.

이어 “그중에는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 중에서 아주 유리한 것만 똑 떼 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시시켜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고용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서 성실 상환자로부터 미리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약하게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 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에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은행은 훨씬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자살자가 엄청 줄어든다. (서민들이)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며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나. (포용적 금융)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성공’

“특검법 처리, 지선 이후 판단할 것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목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첫 연임 사례다.

소병훈 민주당 원내선관위원장인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후보가 과반 찬성을 득표해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정청래 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뉴시스

이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말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후속 조치인 특검 도입에 관해

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특검법 처리를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한 셈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 전 정견발표에서는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연임으로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1년의 임기를 새로 수행하게 됐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개헌 앞두고 여야 충돌… 국힘 ‘졸속’ 반발

여권 “부분 개헌부터 추진”
오늘 본회의 개헌안 표결 예정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국회 계엄 승인권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헌을 합의 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을 예시로 들어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지는 않겠다”며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당과 야당 모두 얘기하는데, 실제 기회가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주야장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 상조니 졸속이니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도 이번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느냐”라며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AI·청년’ 앞세운 與, 박지원·임문영 발탁

군산·김제·부안을, 광산을 출마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6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과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인재로 발표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원택 전 의원의 전북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임문영 부위원장은 민형배 전 의원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탁인재 환영식’을 열고 두 사람의 발탁을 공식화했다.

1987년생인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를 지냈고, 전국 최연소 지역자치단체 체육회장(전북 전주시체육회

장)을 역임했다.

1966년생인 임문영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 PC통신(하이텔) 1세대 IT 전문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정을 함께하며 디지털·인공지능(AI) 정책의 뼈대를 세운 핵심 참모로 통한다.

정 대표는 박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주권 가치를 증명한 산증인이자 민주당의 판을 바꿀 차세대 지도자”라고 했다. 이어 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적극 보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